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이승주
중앙대학교

2014년 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4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8-89-92395-60-1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이승주
중앙대학교

I. 21세기 일본 외교의 도전: 세계적 세력재편과 국내정치의 변동 사이에서

2010년대 일본 외교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2012년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추구하는 한편, 외교안보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의 채택과 그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매우 의욕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영국, 러시아, 호주는 물론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서 북핵 위협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독도와 센카쿠(尖閣)/다오위다오(釣魚台)에 대한 한국 및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2013년 4월 무라야마(村山) 담화 수정을 시사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일본 외교는 주변국과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보수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부상으로 상징되는 세계 및 지역 질서의 재편과 국내정치적 변화의 국면에서 일본 외교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일본 국내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된 적은 1980년대 말을 포함하여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로 오랜 기간 견지되었던 요시다(吉田茂) 독트린은 고도 경제성장과 국제적 쟁점에 대한 수동적 태세를 요체로 하였다. 요시다 독트린이 장기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고도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국제무대에서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걸프전(Gulf War)을 계기로 경제외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¹ 이 시기 일본 외교가 ‘무임승차론,’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 ‘카라오케(カラオケ) 외교’ 등으로 비하된 것은 이 때문이다.² 즉, 일본은 미국이 결정한 정책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치열하게 제기되었다(Inoguchi and Jain 2000).³ 세력 재편의 변화에 대한 불안,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 변화, 급변하는 지역 안보 환경,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 등이 고도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의 수동성을 축으로 하는 요시다 독트린의 전면적 변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⁴



경제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 자신의 입지를 적극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Green 2001).⁵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보통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탈냉전 시대의 일본 외교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오자와는 “군사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국제 공헌을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小沢一郎 1993).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협력법 개정, 그리고 2003년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국제적 공헌을 증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발 빠르게 마련해 나갔다.⁶ 그러나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보통국가화의 귀착점이 미일동맹의 강화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⁷

2013년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직면한 도전은 국내 정치변동과 국제정치적 차원의 세력 재편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국내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념 지형에 기반한 “새로운 대전략”(new grand strategy)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Samuels 2007), 대외적으로도 탈냉전 시대에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협에 대한 외교적 적응이 절실하다(Pyle 2007). 또한 탈냉전 초기의 국제 및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구조적이고 점진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면, 21세기 일본이 직면한 도전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언젠가 중일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우려였다면,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대 일본이 대처해야 할 대중국 문제는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즉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 역시 6자 회담이 가동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였던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다. 이처럼 2010년대 일본은 구조적 변동에 대한 깊은 전략적 고려를 하는 가운데, 현안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일본 외교는 국내정치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가운데 208석의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킬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정책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2년 12월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일본 정치는 빈번한 총리 교체로 ‘정치 리더십의 실종’(political leadership deficit)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5년 6개월 간 재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퇴임 이후, 2006년 9월 1차 아베 내각에서부터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재출범하기까지 6년여의 기간 동안 모두 7명의 총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89년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다.⁸ 이른바 “뒤틀린 국회”(ねじれ国会)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상이하여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회가 입법 기능 부전에 빠지는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Ohya 2008).

이러한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적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외교 면에서 민주당의 집권기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난 대미자주노선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표방한 데서 나타나듯이, 일본 외교는 자민당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차별화된 새로운 외교적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주력하였다(김철편 2012). 그러나 하토야마 정부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는 곧 민주당 정부의 외교적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미국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자민당의 외교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아베 내각의 국내정치적 기반은 고이즈미 내각 이후 가장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내각은 취임 초기 지지율이 70퍼센트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294석을 획득하여 여당으로 복귀하는 데 이어,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115석을 획득하고 20석을 획득한 공명당(公明黨)과 연합함으로써 양원 다수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등 그 국내정치적 기반이 매우 탄탄했다.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되었다.

그렇다면 아베 내각 외교정책의 성격과 방식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외견상 아베 내각의 외교는 일본의 군사안보 능력 증대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외교적 수단과 방식은 보통국가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던 과거에 비해 훨씬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보통국가론은 미일동맹을 재규정함으로써 일본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에 의존하였다. 반면, 아베 내각의 외교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여전히 기본 축으로 하되,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향후 일본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과 세계 안보 체제를 연결하는 적극적 공헌자가 될 것”이라고 피력한 것도 미국 추수(追隨)에서 벗어나 일본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毎日新聞 2013/12/11). 또한, 일본은 국내 차원에서는 자체 외교 및 군사안보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아세안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외교적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13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아태 지역 내 일본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군사와 안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리더십 행사를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Wall Street Journal 2013/10/25).

결국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은 목표와 지향 면에서 보통국가론의 확대 발전, 수단과 방법 면에서 다차원적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다.⁹ 주목할 점은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미일동맹을 재편하고,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시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추구하는 다차원적인 외교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II. 세계질서의 변화와 국내정치 변동

중국의 부상은 세계질서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세계 및 동아시아 차원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외전략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대하는 일본의 입장은 매우 복잡적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2010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약 5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이 되며 일본을 추월하였다.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6년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약 3조 2천억 달러, 일본이 약 1조 1천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중국은 이처럼 거대한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에 일정한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가 2010년 기준 5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시사한다. 이처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한 2000년대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관계는 한층 긴밀해져왔다. 2005년 양국 규모가 1천 84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약 3천 490억 달러에 달하였다(People's Daily Online 2012/02/21).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일본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천 290억 달러에서 2011년 3천 430억 달러로 약 5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본 국내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었던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및 세계 차원의 세력 재편을 촉진하는 변화의 요인인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 요인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 역시 복합적이다. 2010년 이전 일본 정부는 공식 문건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심각한 우려 또한 공식 문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중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현안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복합적인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이 무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공식 문건에 나타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은 중국과의 대결 또는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직접적 방식보다 역내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지역 아키텍처의 형성, 국제 규범의 선도와 같은 간접적 방식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건을 통해 일본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국과 일본 경제력의 역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보다는 대중관계에 있어서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200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행한 연설에는 일본의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난다. 아소 총리는 이 연설에서 중국과 일본은 함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이익(共益)을 가진 상호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중국은 일본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웃”(永遠の隣人)이라는 것이다. 중일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로 아소 총리는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일 양국은 환경, 에너지 보존, 유엔 개혁 등의 지구적 문제에 협력할 현실적 필요성이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다(麻生太郎 2008/10/24).

아소 총리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중일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戰略的互惠關係)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건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아소 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소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양국이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3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하는 현 상태가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라는 인식이 작용하였다(麻生太郎 2008/10/24). 중일 양국이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상대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첫 단계라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480석 가운데 절대다수인 308석을 획득하여 자민당 장기집권의 종결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총리는 세계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지도자, 정부 여당, 일반 국민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의 대외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菅直人 2011/01/20).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해 주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특히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 강화와 해양활동은 커다란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菅直人 2011/01/20).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유화적이고 다소 원칙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즉, 간 총리는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이 현재화되어,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정당한 권리는 주장하되,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평화의 바다(平和な海)가 될 수 있도록 분쟁 방지 해상 규칙을 제정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더 나아가 해양에서 자유항해뿐 아니라, 사적 소유권 문제, 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공공공간(公共空間)에 대한 공통의 규칙을 만드는 것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菅直人 2011/01/20). 또한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방중 기간 중 양국 간 해양 연락 관련 협의를 개최하는 등 6개항 이니셔티브(6つのイニシアティブ)에 기초한 협력과 교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日中外相会談(概要) 2012/07/11).

전략적 호혜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대중국 인식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 역전이 발생한 2010년을 거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당의 집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불과 3년 후인 2012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295석을 획득하여 다시 집권여당으로 복귀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 역전은 바로 이러한 일본 국내정치 변동의 국면과 함께 진행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경계는 자민당 정권으로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직전 행해진 “기로에 선 중일관계”(Japan-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s)라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장관의 연설에서 부각되었다. 겐바 장관은 ‘중국의 발전이 일본을 포함한 지구공동체의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새 지도부와 전략적 호혜관계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는 자민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로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도 유지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겐바 장관은 해양에서 중국의 팽창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던 이전과 달리,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제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해양세력이 될 것임을 공표한 데 대하여 명시적인 일본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겐바 장관은 우려의 표명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이 아니라 국제법을 준수하고 주변국들과의 협조 속에 해양세력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겐바 장관은 영토분쟁을 기화로 악화되는 중일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현안 가운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겐바 장관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구입한 것은 일본의 사유지가 국유지로 변경된 것일 뿐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중일관계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의 틀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기존 정책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재소와 관련해서도 현상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중국이며,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겐바 장관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통해 일본이 주권에 관한 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일본의 대중국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Gemba 2012/11/21).

III. 다차원 외교의 전개

2010년 이후 일본 외교는 보통국가화를 본격적으로 지향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는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지구적 차원의 세력 재편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본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가 명확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10년 이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았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의 기본 방향이 이후 명확해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 자체의 전략적 판단도 유보적이었지만,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질서를 어떻게 짜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일본이 2010년 이전에 대중국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¹⁰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대중국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중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전략적 환경은 일본 외교가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재균형정책을 공식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 아키텍처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일본은 이에 적극 반응하였고, 2010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은 중국으로 분명히 조준되었다.¹¹

둘째, 세력 재편의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 역시 2010년 이후 일본의 다차원적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아시아 안보구조가 한-미-일 및 미-일-호주의 동맹 네트워크, 핵문제 및 특정 문제·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적 협력틀(예, 6자 회담,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 반테러 및 반해적 활동 등 새로운 분야에서 비정규적 형태의 협력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21세기 아시아 지역 안보구조는 중층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아키텍처(アキテクチャ)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며, 일본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을 하게 된 것은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세력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중국정책 기본 방향이 명확해지고,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¹³ 다차원적 접근이라 함은 국내적으로는 보통국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사안보능력 강화 및 제도적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미일동맹을 축으로 아세안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모색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쟁점 분야에 대한 적극적 공헌을 모색하는 것이다.¹⁴ 일본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国家安全保障會議)가 의결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일본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접근은 (1) 안보분야에 관한 능력의 확대 및 강화, (2) 미일동맹의 강화, (3)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전략 강화, (4)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적극적 공헌, (5)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구적 협력 확대, (6) 국가안전보장을 지탱하는 국내기반의 강화와 국내외의 이해 촉진 등이다(国家安全保障會議決定 2013).

1. 군사안보능력 강화와 국내 제도 정비

아베 정부의 다차원적 보통국가화의 핵심은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종 세트”(安保3点セット)이다.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 증대를 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군사력의 실질적 강화나 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는 매우 차별적이다.¹⁵

첫째, 아베 정부는 1957년 <국방기본방침>(國防の基本方針について)을 대체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2013년 12월 의결하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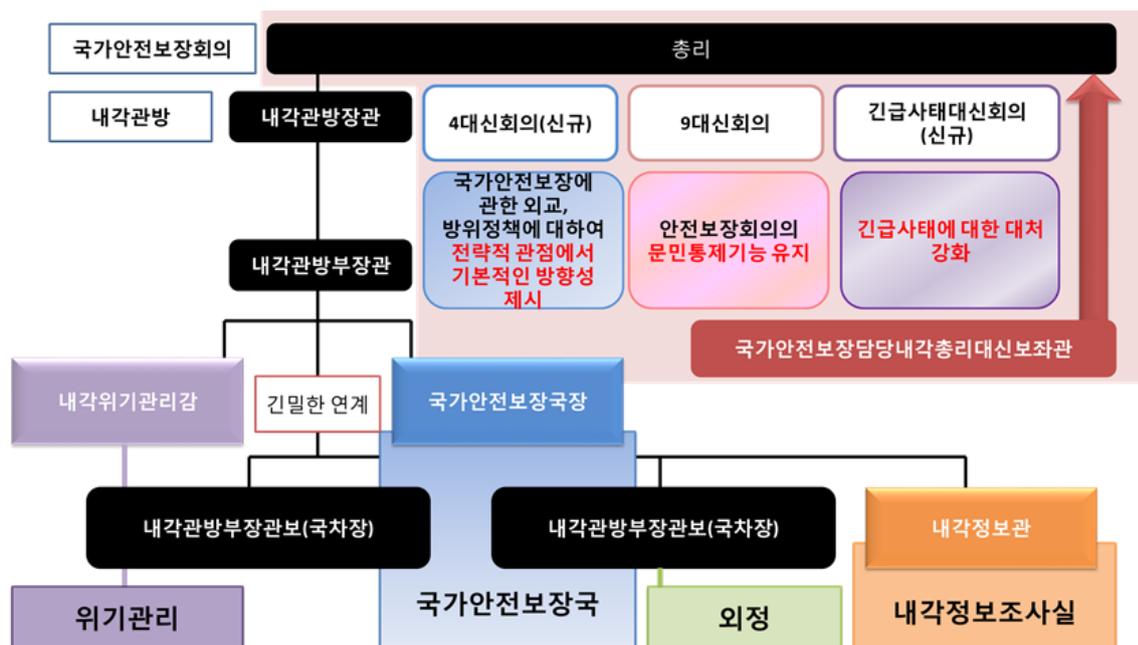
위해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였다(國家安全保障會議決定 2013). 이를 위해 헌법 제9조 2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할 뿐 아니라,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위해 방위 예산을 GDP의 1퍼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 나아가 전시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둘째, 간 내각의 <신방위계획대강>은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구상(基盤的防衛力構想)에서 탈피하여 적응성과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력과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이른바 동적 방위력(動的防衛力)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남서지역 경계감시, 해양초계 강화, 방공·탄도미사일대처 등이 포함된다. 일본이 신속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과거와 같은 일국평화주의(一國平和主義)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菅直人 2011/01/20).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베 내각은 3년 만에 개정한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과 기동력을 중시하는 실효성 높은 “통합기동방위력 구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일종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부대의 창설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며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세계 평화 및 인간안보에 공헌할 것임을 천명하였던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셈이다.

셋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畫)은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國家安全保障會議決定 2013b). 무기 도입 계획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 공동 무인정찰기 3대, 수륙양용차 52대, 이지스함 2척, 잠수함 5척, P1 초계기 23대, F35 전투기 28대, 신형조기경보기 4대, 신형공중급유기 3대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國家安全保障會議決定 2013b).

[그림 1]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도



출처: 防衛省 自衛隊. 2013. 《防衛白書: 平成25年版》. 防衛省 自衛隊.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이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한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 내각은 다양한 외교안보 쟁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그림 1 참조). 첫째, 외교안보 문제와 위기 관리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내각부에 부여함으로써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둘째,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볼 때, 총리, 내각관방장관, 외교장관, 방위장관으로 구성된 4대신 회의를 설치하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¹⁶ 이에 더하여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하여 제도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셋째,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집중화하였다. 일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성격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는 있지만(Takahashi 201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적 강화는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 외교전략의 핵심축은 미일동맹의 강화이다. 자민당이 1997년 개정된 〈미일 간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일동맹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2010년을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하토야마 정부 당시 미일동맹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균열을 메우고 다시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간 총리가 일본 외교의 근간을 형성하는 “5개의 기둥”(5つの柱) 가운데 첫 번째로 미일동맹을 꼽으면서 미일관계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임을 재차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강조되었다. 간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양국 간 현안 문제인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菅直人 2011/01/20).

노다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규칙과 안전보장질서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다 총리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가 2010년 채택한 〈포괄적 경제연휴에 관한 기본방침〉(包括的經濟連携に関する基本方針)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日米首腦會談 2011/11/18).

미일동맹의 강화 방침은 2012년 미일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 성명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의 초석”으로 미일 협력이 아태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지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결국 미일 파트너십의 기본은 평화 유지에 대한 양국의 의지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안보 면에서 동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관



세의 철폐를 약속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 화답하였다(The White House 2013/02/22a).¹⁷

2013년 2월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원하는 아태지역 내 항행의 자유와 법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The White House 2013/02/22b). 아베 총리는 특히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의 기여 또는 역할을 부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013년 방미 기간 중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의 “3개의 화살”(3本の矢)인 금융정책, 보정예산의 편성, 신성장전략을 통해 경기 회복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동맹 상대국으로서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일본이 더 이상 ‘이류국가’(二級國家)가 아니며, 아태 지역을 벗어나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구 공공재(global commons)의 수호자”이며 “규칙의 증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다(安倍晋三総理大臣 2013/02/23).

3. 역내 국가들과 다차원적 협력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 외교전략의 두 번째 요소는 역내 국가들과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이 미일동맹의 강화를 일본 외교정책의 제1 축으로 삼으면서도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 총리는 2011년 1월 일본 외교가 역사적 분수령에 섰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세계정치는 냉전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일본 정부가 인식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복잡성의 근거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대두’, ‘G7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68퍼센트에서 53퍼센트)’, ‘G20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금융-테러의 세계화’ 등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21세기 외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구상력(高い構想力)과 대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아태 지역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菅直人 2011/01/20).

아태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시아외교의 새로운 전개”를 표방하였다. 아태 지역은 경제발전, 민족, 가치 등의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활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아태 지역 내 열린 네트워크(開かれたネットワーク)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 정부는 이 아시아 외교가 일본과 아태 지역 국가들이 서로 윈-윈(win-win)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菅直人 2011/01/20).

아베 정부는 간 정부의 구상을 계승하여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 외교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2013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바다의 혜택: 일본 외교의 새로운 5원칙”(開かれた, 海の恵み: 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를 주제로 진행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아시아 해양을 철저히 개방하여 자유와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불변의 국익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센카쿠(尖閣)/다오위다오(釣魚台)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베 정부는 영유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자카르타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기존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재로서 자유롭고 열린 해양”과 “보편적 가치의 확대” 등을 유달리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安倍晋三総理大臣 2013/01/18). 일본의 이러한 방침은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해양에서 가중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일본은 특히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7월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대 아세안 수출이 2.3배 증가하고, 아세안의 대 일본 수출 역시 2.5배 증가한 데서 나타나듯이,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즉,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포지티브섬’(プラス・サム)의 관계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는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의 안전보장과 항해의 자유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航海の自由に責任をもつ間柄)임을 강조하였다(安倍晋三総理大臣 2013/07/26).

일본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과 아세안 양측은 2013년 개최된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아세안 우호협력 4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12월 일-아세안 특별수뇌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과 아세안이 양자관계의 심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아세안 연결성(ASEAN 連結性)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력 프로젝트(フラッグシップ・プロジェクト)를 착실히 진행하여 제도적 연결성을 위한 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日・ASEAN外相會議(概要) 2013/06/30). 이와 동시에 개최된 일-아세안+3 외무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장관은 아세안 연결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인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 회의를 2013년 7월 도쿄에서 개최하고,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EAF)을 2013년 교토에서 개최하며, 아세안+3 고등교육의 유동성과 질을 보증하는 워킹그룹회의를 2013년 가을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 등이 일본의 제안이다(ASEAN + 3外相會議(概要). 2013/06/30).

일본 정부가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우선 순위는 다소 밀리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하여 총리 또는 외무장관 차원의 매우 기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2011년 간 총리는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가장 가까운 나라임을 밝히고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痛切な反省)을 표하였지만, 한국과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언급만 했을 뿐 구체성을 띤 제안이나 요청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3년 7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장관이 한일 양국은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양국의 갈등을 촉발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자는 지극히 원론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日韓外相會談(概要). 2013/07/01).

4. 네트워크 외교와 새로운 아키텍처의 형성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대응은 지역협력의 구상과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역대 협력 범위와 관련, 일본 정부는 아태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역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중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를 넘어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이다. 일본이 이렇게 지역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중국이 아세안+3를 지역협력의 기본틀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며, 아태 지역을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지역 공동이념과 기본 규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首腦主導のフォーラム)로 확대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장이 바로 2011년 미일정상회담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日米首腦會談 2011/11/18). 미일 양국 사이에 이러한 입장은 2012년에도 재확인되었다. 2012년 4월 “미래를 향한 공통의 비전”이라는 제목이 달린 미일공동성명에서 양국은 EAS 및 APEC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규칙과 규범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아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양국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며, 아태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¹⁸ 이 과정에서 일본은 “친구 국가”(仲間である國)가 될 것이며(安倍晋三總理大臣 2013/02/23),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협력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日米共同聲明：未來に向けた共通のビジョン. 2012/04/29).

아태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일본 외교의 방침은 2012년 겐바 외무장관과 2013년 아베 총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우선 겐바 외무장관은 아태 지역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외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교화하는 노력을 펼쳤다. 일본이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연계, 행위자의 다양화, IT혁명 등으로 상징되는 21세기 세계정치가 세력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시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태 지역은 역내 무역 의존도가 70퍼센트에 달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공급사슬(supply chain)로 연결되어 있어 역내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역내 주둔하고 있는 병력 규모가 약 670만에 달하고, 군사 현대화를 위한 경쟁이 고조되는 등 위험 또한 상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진다(玄葉光一郎 2011).

겐바 외무장관이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아태 지역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첫째, 아태 지역은 지역 협력의 구조가 매우 다층적이다. 한-중-일, 한-미-일, 미-일-호주 대화와 같은 삼각협력 채널, 지역 네트워크 창조에 필수불가결한 아세안의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노력, 아세안+3, EAS, ARF 등 좀 더 확대된 협력 채널, APEC과 같은 가장 넓은 범위의 지역협력의 틀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이 때문에 역내 모든 국가에게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 연계뿐 아니라, 민간기업, NGO, 지식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류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겐바 외무장관은 미중 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네트워크와 규칙을 만드는 데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玄葉光一郎 2011).

겐바 외무장관은 아태 지역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며, 특히 공공재인 해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겐바 외무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2010년 이전 중일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주로 강조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사안별 협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기본틀을 만드는 데서 양국의 협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양자적 차원보다는 미-중-일 3국 간 전략대화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玄葉光一郎 2011).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양자 관계의 틀에서 대 중국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중국을 네트워크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5. 규칙 제정자로서 일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본은 새로운 질서를 지지하는 규칙의 창조자 또는 제정자로서 역할을 강조한다.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장 기회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玄葉光一郎 2011).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의 기반 위에 아태 지역의 안정적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규칙 제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태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동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이념과 규칙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菅直人 2011/01/20).

아베 총리도 유사한 맥락에서 2013년 일본외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보호하고 제정하는 데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5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해양 국가로서 일본은 해양이 힘이 아니라 법과 규칙에 의해 지배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계된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일본과 역내 국가 사이의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래를 짚어질 세대 간의 교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安倍晋三總理大臣 2013/01/18). 아베 총리의 5원칙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일본이 아태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메콩강 유역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일본은 또한 역내 국가들과 가치, 규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장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 사이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본다.

일본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상력이 뒷받침될 때 자국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겐바 외무장관이 밝힌 구상력이란 과제해결의 선두주자(課題解決のトップランナ)가 되기 위해 독창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으로, 일본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다수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력 역시 풍부하다고 본다. 즉, 일본이 후기 밀레니엄개발목표(Pos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ost-MDGs)의 지도이념으로서 인간안보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한 바 있다는 것이다(玄葉光一郎 2011). 또한 구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제안한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른바 ‘역전현상’이다. 국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대외 부문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겐바 외무장관은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는 TPP 참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간 총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폐색상황(閉塞狀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개방(國を開)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던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간 총리는 2011년을 “헤이세이 개국”(平成の開國)의 원년이라고 명명하며, 일본의 명운을 걸고 개국을 추진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일본의 개방에는 항상 농업 부문이 장애 요인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농업을 지키는 개혁”(「守り」による改革)에서 “공세적 자세”(攻めの姿勢)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일본 농업은 무역 자유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쇠퇴일로에 있으며 따라서 수세적인 대응이 아니라 농업의 재생을 목표로 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간 총리의 입장이었다. 무역 및 투자, 인제 교류의 자유화, 인도, 페루, 호주, EU, 한국, 몽골 등과의 포괄적인 경제연휴 추진, TPP 협의 추진 등이 간 총리가 지칭하는 헤이세이 개국의 주 내용이다(菅直人 2011/01/20).

특히 TPP 참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력이 필요하다. 일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6년 1억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수요만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아태 지역의 중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며 따라서 TPP 참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TPP 참여와 같은 외교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나, 양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찾아 독창적 이니셔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구상력이라고 강조되고 있다(玄葉光一郎 2011).

6.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중층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는 평화유지활동(PKO)과 비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기후변화 등의 쟁점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구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는 일본의 외교전략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ODA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보건 및 교육 분야의 새로운 공헌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간 공약”(菅コミットメント)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ODA를 2012년까지 2배 증가시킬 것임을 공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일본이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green energy)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세계적 노력을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 천명하였다(菅直人 2011/01/20).

IV. 결론 및 함의

2010년대 일본 외교정책은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세력 재편과 두 차례에 걸친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권 교체라는 이중의 변화 국면 속에서 전개되었다. 대외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 일본의 외교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시기였다. 특히, 미국의 재균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대중국정책은 더욱 분명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국내적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부 당시 악화된 미일 관계를 회복하여 미일동맹을 다시 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확정하는 한편, 보통국가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국민적 설득을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2010년대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은 보통국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아베 내각이 재출범하면서 일본 외교정책의 보통국가화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영토 문제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여 전략적 견제의 핵심인 중국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과의 갈등까지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베 정부의 외



교정책은 일견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공이 여러 다양한 조건의 조합 위에 성취된 것이라는 점에서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즉,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대한 협조,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국들로부터의 보편성 획득, 아베 내각에 대한 국내적 지지의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유동적이다.

첫째,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본 외교에 있어 상수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외교적 행보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으로 인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일 협력의 약화로 인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지역 질서의 형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아베 정부는 다차원적 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조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입각한 해양 질서의 수립 및 유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현재와 같은 보수적 외교 행보는 보편성에 대한 강조가 수사의 차원을 넘어 행위로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아베 정부가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외교를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내적 지지 때문이다.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는 일견 견고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적 쟁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TPP 협상은 아베 정부가 당면한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TPP 협상에서 5개 민감품목의 개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전품목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20.9퍼센트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共同通信 2013/10/28).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화를 TPP 협상의 목표로 공언한 만큼 아베 내각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전달보다 5퍼센트 하락한 49퍼센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3월에 기록한 70퍼센트에 비해 무려 21퍼센트나 감소한 수치이다(毎日新聞 2013/12/27). 지지율의 감소는 <특정비밀보호법>(特定秘密保護法)의 제정에 대한 반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3년 10월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각각 35.9퍼센트와 50.8퍼센트로 나타났다(共同通信 2013/10/28). 법안이 통과된 후 2013년 12월 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4.1퍼센트와 28.2퍼센트로 나타났다(共同通信 2013/12/09). 이러한 국내정치 상황의 전개는 아베 내각이 보수적인 지지층에 기대어 대외적으로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 행보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후 55.2퍼센트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日本經濟新聞 2013/12/29).

아베 내각이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노믹스(Abenomics)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아베 취임 초기인 2013년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4.3퍼센트와 3.8퍼센트로 나타나 일본 경제 회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Wall Street Journal 2013/11/13). 이에 대한 일본 국민 일반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아베 내각 취임 100일이 맞이할 즈음인 2013년 4월 7일에 실시한 여



론조사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74퍼센트를 차지하였다(日本經濟新聞 2013/04/07). 그러나 취임 1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2013년 3분기 일본 GDP 증가율은 1.9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저하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¹⁹ 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베 내각이 향후 보수화의 길을 걷는 데만 의존하여 공세적 외교정책을 지탱하는 데 상당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향후 기존 정책 노선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내각 외교정책의 본격적 시험은 지금부터이다. ■



주(註)

- ¹ 걸프전 당시 일본의 외교적 대응에 대해서는 Inoguchi (1991); Purrington and A. K. (1991); Purrington (1992) 참조.
- ² 한편, 켈트 칼더(Kent Calder)는 냉전기 일본이 자국의 외교 어젠다를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 주요 쟁점에 대한 개혁의 동인을 외부의 압력(外壓)에서 찾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응국가’(reactive state)로 규정하였다(Calder 1988).
- ³ 한편, 에릭 헤긴보섬과 리처드 사무엘스(Eric Heginbotham and Richard Samuels)는 일본 외교정책은 외교안보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Heginbotham and Samuels 1998).
- ⁴ 리처드 로스크랜스(Richard Rosecrance)는 냉전기 일본이 “통상국가”(trading state)의 성공적 사례임을 지적한다(Rosecrance 1986).
- ⁵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일본의 이러한 자세를 “주저하는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로 규정하였다(Green 2001).
- ⁶ 일본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로는 Tanaka (1994) 참조.
- ⁷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는 국내정치적 제약, 미일동맹, 헌법 9 조 등 일본 외교의 근본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제약 요소가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소에야 요시히데 2007).
- ⁸ 뒤틀린 국회는 1989 년 이후 1989 년, 1998 년, 2007 년, 2010 년, 2012 년 등 모두 5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다. 마이클 씨스와 유키 야나이(Michael F. Thies and Yuki Yanai)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뒤틀린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 건수 자체가 적었을 뿐 아니라, 법안이 수정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Thies and Yanai 2012).
- ⁹ 박영준은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이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박영준 2013).
- ¹⁰ 21 세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는 Ross and Feng (2008), Shambough (2012) 참조
- ¹¹ 21 세기 미중 아키텍처 경쟁에 대해서는 손열(2011) 참조.
- ¹² 아시아 지역 안보구조의 아키텍처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東京財團(2010)에서 최초로 제시하였다.
- ¹³ 다차원적 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내 논의는 2008 년 동경제단(東京財團)의 정책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Tokyo Foundation 2008).
- ¹⁴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때로는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차원적 접근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 ¹⁵ 2000 년대 초 고이즈미 총리 역시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Shinoda 2007).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 ¹⁶ 기존의 9 대신 회의는 유지되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防衛省 自衛隊 2013).



- ¹⁷ TPP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일-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대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협정을 지향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日·ASEAN 外相會議(概要) 2013/06/30).
- ¹⁸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네트워크적 시도에 대해서는 손열(2009) 참조.
- ¹⁹ 아베노믹스(Abenomics)란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난 20 년 간의 경제 정체로부터 탈피하려는 아베 내각의 친성장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베 내각은 “3 개의 화살”(三本の矢)인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성장전략’을 통해 향후 “강한 일본, 강한 경제, 풍요롭게 안전한 생활”을 모토로 하는 “재생의 10년”(再生の10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閣議決定 2013/06/14). 아베노믹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Patrick (2013) 참조.



참고문헌

- 김점마. 2012.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의 ‘이념적 리더십’: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6: 113-139.
- 박영준. 2013.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9(1): 91-121.
- 박홍영. 2006. 《일본ODA와 국제정치》. 한울아카데미.
- 소에야 요시히데 지음. 박철희 · 윤수경 옮김. 2006.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
오름.
- 손열. 2009.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 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EAI NSP Report 34*.
- 손열. 2011. “위기 이후 동아시아 다자경제제도의 건축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네트워크 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17(1): 39-66.
- 이숙중. 2000. “일본의 국제환경협력과 환경외교.”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 外務省. 2013. “開かれた、海の恵み: 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abe_0118j.html.
- 外務省. 2013. “日本は戻ってきました. (CSISでの政策スピーチ).”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abe_us_0222.html.
- 外務省. 2013. “「3本の矢」で一層のWin-Win関係へに関する講演.”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pdfs/pm_ja_130726_jp.pdf
- 外務省. 2008. “日中平和友好條約締結30周年記念レセプション.”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0/easo_1024.html.
- 小澤一郎. 1993. 《日本改造計畫》. 東京: 講談社.
- 外務省. 1992. “旧・政府開發援助大綱.”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03_hakusho/ODA2003/html/honpen/hp203000200.htm.
- 首相官邸. 2013.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について.”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3/_icsFiles/afieldfile/2013/06/20/20130614-05.pdf.
- 首相官邸. 2011. “外交に関する講演. 「歴史の分水嶺に立つ日本外交」.”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101/20speech.html>.
- 防衛省. 2013.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df/security_strategy.pdf.
- 防衛省. 2013. “中期防衛力整備計畫(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ki_seibi26-30.pdf.
- 外務省. 2011. “日本の豊かさはアジア太平洋地域とともに.”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3/egnb_1214.html.
- 共同通信. 2013/10/28.
- 東京財団. 2011. 《アジア太平洋の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 地域安全保障の重層的構造》. 東京: 日本
評論社.
- 外務省. 2013. “日韓外相会談(概要).”



- http://www.mofa.go.jp/mofaj/kaidan/page5_000203.html.
日本經濟新聞. 2013/04/07
日本經濟新聞. 2013/12/29.
外務省. 2011. “日米首腦會談(概要).”
http://www.mofa.go.jp/mofaj/kaidan/s_noda/apec_2011/j_usa_1111.html
外務省. 2012. “日米共同聲明：未來に向けた共通のビジョン.”
http://www.mofa.go.jp/mofaj/kaidan/s_noda/usa_120429/pdfs/Joint_Statement_jp.pdf.
外務省. 2012. “日中外相會談(概要).”
http://www.mofa.go.jp/mofaj/kaidan/g_gemba/asean1207/china.html
外務省. 2013. “日·ASEAN外相會議(概要).”
http://www.mofa.go.jp/mofaj/kaidan/page3_000282.html
防衛省. 2013. 《防衛白書: 平成25年版》. 東京: 日經印刷.
毎日新聞. 2013/12/27
外務省. 2013. “第14回ASEAN + 3外相會議(概要)”
http://www.mofa.go.jp/mofaj/kaidan/page3_000283.html
Bush, Richard. 2010. *The Perils of Proximity: China-Japan Security Relation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alder, Kent E.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517-541.
Gemba, Koichiro. 2012. Foreign Minister of Japan. Japan-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s.
Green, Michael J. 2001.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Palgrave.
Heginbotham, Eric and Richard J. Samuels. 1998. “Mercantile Realis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2(4): 171-203.
Inoguchi, Takashi and Purnenda Chandra Jain. 2000. “Introduction: Beyond Karaoke Diplomacy?” Takashi Inoguchi and Purnenda Chandra Jain, eds. *Japanese Foreign Policy Today*. Palgrave.
Inoguchi, Takashi. 1991. “Japan's Response to the Gulf Crisis: An Analytical Overview.”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7(2): 257-273.
Ohya, Takehiro. 2008. “Twisted Diet: A Failure in Legislating Politics in Japan.” *Legisprudence* 2(3): 253-269.
Patrick, Hugh. 2013. Abenomics: Japan's New Economic Policy Package. Occasional Paper Series No. 62. Center on Japanese Economy and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People's Daily Online. 2012/02/21.
Purrington, Courtesy. 1992. “Tokyo's Policy Responses During the Gulf War and the Impact of the “Iraqi Shock” on Japan.” *Pacific Affairs* 65(2): 161-181.
Purrington, Courtesy and A. K. 1992. “Tokyo's Policy Responses during the Gulf Crisis.” *Asian Survey* 31(4): 307-324.
Pyle, Kenneth B. 2007.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Public Affairs.
Rosecrance, Richard.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Basic Books.



- Ross, Robert S. and Zhu Feng. 2008.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 Samuel, Richard J.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 Shambough, David. 2013.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oman & Littlefield.
- Shinoda, Tomohito. 2007. *Koizumi Diplomacy: Japan's Kantei Approach to Foreign and Defense Affair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Tanaka, Akihiko. 1994. "Rhetorics and Limitations of Japan's New Internationalism." *Japanese Studies* 14(1): 3-33.
- The White House. 2013a.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ebruary 22.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22/joint-statement-united-states-and-japan>.
- _____. 2013b.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fter Bilateral Meeting." February 22.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22/remarks-president-obama-and-prime-minister-abe-japan-after-bilateral-mee>.
- Thies, Michael F. and Yuki Yanai. *Divided Parliaments and Lawmaking: Japan's Twisted Diet*. Unpublished Manuscript.
- Tokyo Foundation. 2008. *New Security Strategy: Multilayered and Cooperative Security Strategy*. Tokyo Foundation Policy Recommendations.
- Wall Street Journal*. 2013/11/13.
- Wall Street Journal*. 2013/10/25.



필자약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 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APEC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공편) 등이 있다. 그 외 <한국정치학회보>,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균형 전략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외교”(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본 자료집은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양규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